

산업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강원대, 정준호)

1.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 최근 경제정책 담론으로서 '산업정책의 회귀'(industrial policy is back)

○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과 지역 특수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

- 하지만 장하준 교수는 국가차원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지역차원에서 제3이탈리아와 바덴뷔르템베르크 등이 선별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을 제시하며 선별적 산업정책의 일반성을 주장

○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EU(예: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국(예: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결정), 일본(예: 새로운 일본주식회사의 창출하려는 의지의 표명) 등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직·간접적인 관심 표명

- UNCTAD(예: 산업정책의 재고), 세계은행(예: 개발수단으로서 산업정책 재수용), IMF(예: 논쟁 중), OECD(예: 보고서* 출간) 등 국제기구들도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

* *Fostering New Sources of Growth: Is There a Role for Industr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비판적 기사 게재

* *Picking Winners, Saving Losers: Industrial Policy Is Back in Fashion. Have Governments Learned from Past Failures?* (2010년 8월 5일자)

□ 산업정책의 정의 및 정책수단

- 산업정책이란 “경제의 특정부문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direction) 것에 관한 정부정책” (Oxford Dictionary of Economics)
 - 산업정책은 산업에 선별적인 영향을 가하는 특정유형의 성장정책으로 시장 시그널에 대한 국가의 특정산업의 계획적인 선호가 특정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련의 공급주의적인 정책(Chang, 2010)
 -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 강화적인 국가개입이며, 주로 전자에 집중하는 경향(예: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추구)
- 산업정책은 국가의 개입방식에 따라 수직적인 산업정책과 수평적인(기능적인) 산업정책으로 구분
 - 전자는 산업특수적인 고전적인 산업정책을 말하며, 후자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 생산요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일컫음.
 - 요소별 기능적 지원이 수직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예: R&D 투자가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둘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님.

〈표 1〉 국가의 시장개입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

자유방입정책	시장강화정책	일반 공급주도정책	선별 공급주도정책
• 공기업의 민영화 • 무역장벽의 완화 •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 시장진입과 퇴출의 자유화	• 반독점정책 • 투명한 기업정보 시스템 구축 • 서비스시장 활성화 • 화를 위한 수요측면 보조금(예: 바우처) • 투자자를 위한 문제해결	• 일반적 수출 진흥 • R&D, 혁신 인센티브 • 기업가정신 고양 • 자원효율성 증진 • 하향식의 공공(리얼)서비스 전달	• 특정활동(산업부문), 기술, 클러스터(또는 가치사슬) 육성 • 전용연구 및 숙련인력센터 설립 • 특정유형의 하향식 공공(리얼)서비스 전달

주: 리얼 서비스는 공공부문 지원의 주가 되어 온 자금지원 대신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물 재화 및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 마케팅, 기술, 조직 및 컨설팅, IT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자료: 정준호(2012a).

○ 산업정책의 수단은 아래와 같이 다양

- 선별적인 금융지원(보조금, 대출), 무역정책[산업별 차별적 관세, 비관세 장벽(반덤핑 관세, 수출보조금)], 특정산업과 분야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정부조달정책(예: 방위산업), 특정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 폐지
- 기능적인 산업정책 수단으로는 인프라 지원, 투자와 인적자본 개발 인센티브, 성장 강화적인 경제적 프레임워크의 재구성 등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특정부문이나 기업에 대한 선별을 지향하지 않음.

□ 산업정책의 논거

○ 시장실패(시장의 불완전성) 교정

-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정(+)의 외부효과(예: R&D 투자, 특정산업에 기반하지만 정책수단은 수평적인 클러스터 정책)

○ 전략적인 무역정책

- 수확체증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예: 수출 보조금 경쟁)

- 이러한 산업은 주로 시장진입에 따른 높은 매몰비용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반(예: 차세대 제품개발을 위해 상당한 R&D 지출이 필요한 분야, 생산에 따라 가파른 학습곡선을 가진 산업, 생산, 유통 및 사후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분야 등)

○ 유치산업 보호

- 실행에 의한 학습이 핵심 논거로 산업공정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
- 이는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

○ 조정실패의 보완

- 한 분야의 투자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보완적인 투입재와 지원 서비스 분야의 동시적인 투자가 필요
- 하버드 대학의 Rodrik 교수는 한국과 대만정부의 성공은 특히 이러한 조정실패를 야기하지 않은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
- ‘missing markets’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를 보완하는 공적인 인프라의 지원이 중요

○ 기타 논거

- 국가의 안전(national security): 교통, 통신, 선진 전자장비 등 군사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분야
- 먹거리 안전, 환경, 에너지, 문화적 정체성(예: 스크린 쿼터)
- 경제적 쇼크에 대한 임시적인 대응: 거시 경제적 안정화(예: 주요 기업의 금융구제 또는 국유화) 조정비용의 완화(예: 담배와 섬유 등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특정지역의 쇠퇴 방지(예: 지리적 집중이 심한 단일 산업도시는 경제적 쇼크가 경제 전반에 스트레스)
- 국가의 아이콘 보호(예: 영국의 롤스로이스(Rolls-Royce) 국유화)
- 이러한 임시적인 산업정책의 국가개입의 효과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잘못된 투자(bets)에 대한 패널티는 실패’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그렇지 않은 입장 간의 격렬한 논쟁이 발생

○ 산업특수적 정부개입, 즉 산업정책은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

- 시장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자원 배분의 제약,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음.

2.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산업정책은 상술한 경제 및 기타 논리에 근거하여 수직적인 산업정책과 수평적인(기능적인) 산업정책으로 수행되어 오다 최근 경제주체 간의 자기발전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
- 최근 산업정책은 ‘리스트에서 하이에크’ 로의 인식론적 전환에 기반하여 세계은행, OECD, EU 등이 지지,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정준호, 2012)

〈표 2〉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비교

구분	수직적인 산업정책: 후방 연계	수평적인 산업정책: 시장실패	개방경제 산업정책: 연계의 실증
민간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대(유치산업 보호 또는 기타 가격 왜곡 형태)	보조금(사적 수익이 사회적 수익보다 낮다고 할 경우)	준지대(노력 또는 성과에 의존적인 지대 기회)
민간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법	지대가 기업수준의 학습에 투자	배경조건의 개선: 투자환경 제고	지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공동으로 근본원인 분석에 참여: 구속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장애요인의 확인
포커스	<u>미시</u> 및 부문(‘picking winners’)	<u>거시</u> : 제도적 인프라-금융시장과 규제환경(‘backing winners’)	<u>중범위</u> : 행위 주체들 간의 연계(‘matching winners’)
주요 개념 축	일반적으로 강력한 <u>정부능력</u> 이 기술수준의 학습이 가능케 하고 모니터링	<u>배경조건</u> : 시장실패와 왜곡의 감소, 거시 총계의 균형 보장 및 총계적으로 성장에 대한 많은 미시적인 장애요인의 제거	<u>탐색 네트워크</u> : 연속적인 제약의 확인 이후, 이러한 제약과 관련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들을 확인
주요 문제	국가 포획: 역량의 개발이 견고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와해, 거시와 미시 간의 연계 잠금(lock-in)	다양한 의미에서의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잠재력의 증가 사이의 연계 부재	미시적 혁신과 거시 조건의 개선 사이의 갭, 심층적인 구속 제약의 존재, 미시 변화는 반드시 임계규모를 달성하지 않음.
사례	유치산업 보호	규제 부담의 경감, VC 펀드의 운영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VC 네트워크 개발

자료: Kuznetsov and Sabel(2011).

○ 산업정책과 연관된 대표적 논거로는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론

-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산업화와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 전개(예: Amsden, 1989)
- 이러한 산업정책은 강력한 국가개입과 특정산업의 선별, 채찍과 당근을 수반하는 성과기준의 도입과 경쟁, 이러한 작동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적 강제조건이 필요(Aoki et al., 1996; Khan and Blankenburg, 2009).
- 이러한 담론은 정부가 사적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승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것(picking winners), 즉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보다 더 나쁘며,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

〈표 3〉 산업정책의 주요 담론지형

담론		주요 논리
기존 담론	발전국가론 (Johnson, Amsden, Wade)	· 민간부문과 연계를 통해 정부가 승자를 선별한다(<u>picking winners</u>).
	지대추구론 (Krueger)	· 정부는 승자를 선택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담론	자기발전 (Rodrik)	· 승자는 탐색과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통해 그 자신을 선별한다(<u>matching winners</u>)
	제품공간 (Hidalgo, Klinger, Barabási, Hausmann)	· 승자는 즉각적으로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어떻게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네트워크형 발전국가론 및 네트워크 실패론, (Block, O'Riain, Whitford and Schrank)	· 승자는 탐색과 문제해결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그 자신을 집합적으로 구성한다(<u>making winners collectively</u>).

자료: 정준호(2012a).

○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서 지대추구론

-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승자를 선별할 수도, 또한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예: Krueger, 1990)
- 이는 자유시장과 야경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동

아시아 이외의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정부와 기업 간 각종 부패(즉, 정부실패)로 인한 산업정책의 실패사례들을 보여줌.

- 세계화 이후 새로운 산업정책론이 부상: 개방적인 네트워크 효과 강조
 -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예: Rodrik, 2007).
 - 기존의 산업정책 담론과 달리 세계화, 분권화, 생산의 탈집중화 등의 경향에 조응하여 국가의 역할을 선별적인 자원동원, 기회의 창 제공, 중개자, 촉진자로서 설정(Block, 2008).
 - 국가와 시장이라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정방식보다는 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즉 네트워크를 상징하여 기존 논의와 차별적(Whitford and Schrank, 2011).
 - 이들 논의는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분권적인 정치구조 하에서도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
- Rodrik(2007)의 정보외부효과론은 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영역들을 찾아가고 발견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전략적 협력으로서 산업정책을 사고
 - 이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왜곡을 교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정보를 이끌어내는 정책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이해
 - 국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s)의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효과적
- Hidalgo et al.(2007)의 제품공간론은 산업화는 성장을 가속화하는 외부효과를 창출하는데, 제품의 관련 다양성을 기술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그러한 발전을 설명한다고 주장

- 경제발전이 다양성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자본축적과정의 예측보다는 상이한 산업들과 제품들의 진화과정에 더욱더 주목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방과 주정부 수준에서 기능주의적인 R&D, 자금,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사실상 발전주의적인 경향을 산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의 경우 실제 산업부처는 상무성이 아니라 국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자는 거대한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고수익 벤처 사업을 지원, 특히 이러한 분야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수요 창출이 성공에 핵심적인데, 사실상 국방부가 ‘인내 자본’의 역할을 수행

〈표 4〉 추적형과 네트워크형 발전국가 비교

	추적형 발전국가(예: 한국)	네트워크형 발전국가(예: 미국)
정치	중앙집권적	분권적
금융	금융억압(또는 금융제약)	벤처캐피탈
산업	가공조립산업	범용, 첨단산업
기업	대기업 중심	대기업/벤처기업
노동/숙련	배제/숙련 절약	배제/숙련 절약
정책	명시적	암묵적
목표	추적	혁신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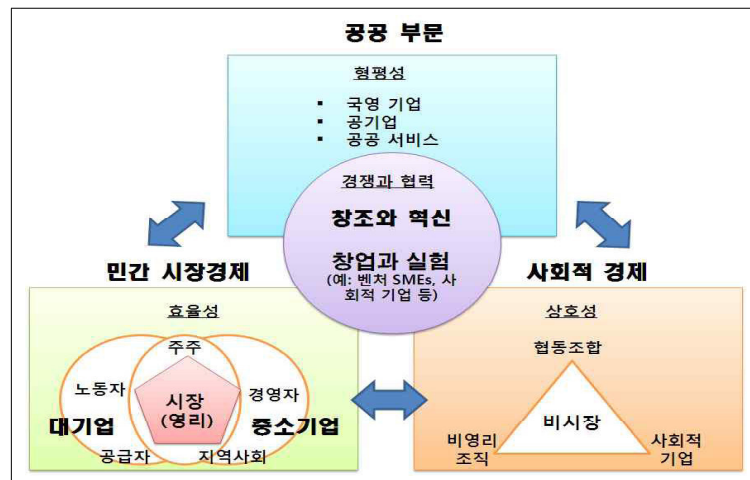
자료: 정준호(2012a).

3.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가능성

□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 경제를 공공 부문, 민간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구분할 경우 각기 다른 조직원리, 즉 교역(거래), 재분배, 상호성에 따라 경제가 작동
- 이들 세 가지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작용, 평판과 신뢰는 선별기능의 일환으로 양적인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생태계로서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체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창업이나 경제활동의 발생과 새로운 실험을 지속적으로 용인해야 함.

〈그림 4〉 생태계로서의 경제



자료: 정준호(2012b).

- 생산자로서의 경제시민권의 확대(즉, 창업과 실험)는 경제적 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임.
- 생산자로서 시민의 경제적 참여는 작업장 수준의 고속권형성(예: 일본), 정보공유, 협의(consultation), 이사회 참가 등 공동경영(co-determination,

예: 독일), 시장진입에 의한 창업 장벽의 완화(예: 미국) 등 세 가지의 역사적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혁신적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도모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경제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진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가능케 하는 신산업정책의 가능성

- 기존 산업정책이 주로 특정기업을 지원하여 해외 경쟁자와의 추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면, 신산업정책은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한 편익이 사회전체에 파급된다는 가정 하에 혁신창출을 도모하는 것임.
- 이는 집합적 발견의 과정으로서 혁신의 구성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집합적 효율성과 구성된 우위(constructed advantages)가 핵심어(정준호, 2012).
- 이는 이상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실패’의 논거에 기반(Schrank and Whitford, 2011)
- 기회주의가 극복되고 상호 간에 역량이 있어야 정(+)의 네트워크 효과가 창출될 수 있지만, 신뢰가 부족하거나 상호 간에 격차가 심한 경우 부(-)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적 관점에서 전자가 문제라면 협회, 협동조합, 중재, 갈등해결 절차 등과 같은 제도 구축에 집중해야 되고, 후자가 문제라면 교육과 훈련,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공급자개발 프로그램 등에 집중해야 함.
-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신뢰부족과 과도한 기업 간의 격차 때문이라면, 이러한 네트워크 실패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요체임.
- 기업 간 격차의 심화가 시장기제의 작동에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규제와

보호가 필요

-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공정거래기반의 강화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영역의 보호와 규제의 강화(즉, 경쟁의 구체화)와 같은 정책을 동시에 요구
- 또한 생산자로서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성제약에 대한 검토(예: 파산법의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제도의 개편 등)가 필요

□ 산업정책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

-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추격을 위한 성장 강화적인 기제창출의 설계자로서가 아니라 기술혁신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로서 국가 역할의 변화가 필요
- 이는 국가가 애덤 스미스적인 의미의 순수 공공재(예: 국방과 치안)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분권화된 시스템의 설계와 동시에 공동체의 보호와 유지라는 의미의 공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 발전모델에서 현장노동의 배제, 즉 숙련과 기술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산업정책을 성장 강화적인 기제뿐만 아니라 복지 강화적인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노동이 혁신의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
- 연대성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고, 집합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구성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즉 각자가 생산의 역할(stake)을 갖는 방향으로 혁신에 대한 참여가 필요
- 이를 위해서 현장노동의 숙련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사회적 소통을 아

우르는 숙련 개념의 확장이 필요, 예를 들면 노조단위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숙련 개념의 창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본과의 긴밀한 대화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적 자본에 대한 민주적 규율이 정착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 노·사·정 3자가 대등하게 산업정책의 형성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로 국한됐으며,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투자의 사회화 전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적 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공공부문이 벤처자본가로서 기능, 공공부문이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다른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의 연계를 주선하고 주요한 정부계약자, 벤처자본가, 경영지원에 관한 특정 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 이는 시장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소위 생태적 규율 방식에 의존

-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과 복지 강화적인 기제를 동시에 추동할 수 있는 권력기반의 구축이 중요한데, 노동이 약한 상황에서 시민적·민주적 규율의 강화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이러한 경로의 창출에서 핵심 관건

○ 거시경제의 안정, 공정거래 기반의 강화, 공공재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개방의 속도 조절, 보조금과 세금, 규제 등을 통한 보호를 통해 기존 산업경로와의 불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혁신의 정치·경제적 잠금(lock-in)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견제와 균형 내의 보호’, 즉 조건부(contingent) 보호를 의미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통제와 규율은 여기서 매우 중요

<참고문헌>

- 정준호(2012a),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신산업정책론의 가능성과 한계”, 『동향과 전망』, 85호, pp. 50-88.
- 정준호(2012b), “분배친화적인 산업정책의 가능성을 검토”, 유종일 엮음,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모티브북.
- 정준호(2014) “경제·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경제·산업구조 양극화의 기원”, 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준호·이병천(2007), “한국의 탈추격 시스템, 어디로 가는가: ‘생산-복지 체제’의 성격에 대한 시론”, 『제4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시장 국가냐 복지국가냐』 발표 논문집.
- Aoki, M., Kim, H.-K. and Okun, M. (1996),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ck, F. (2008),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The Rise of a Hidden Developmental Stat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 Society*, 36(2), pp. 169-206.
- Chang, H.-J. (2010), “Industrial Policy: Can We Go Beyond an Unproductive Confrontation?”, *Working Papers* 2010/1, Turkish Economic Association.
- Chang H.-J. and Cheema, A. (2001), “Conditions for Successful Technology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Learning Rents, State Structures, and Institutions”, Discussion Paper Series # 2001-8,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New Technologies, Maastricht, The Netherlands.
- Hidalgo, C. A., Klinger, B., Barabási, A.-L. and Hausmann, R. (2007), “The Product Space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Nations”, *Science*, 317, pp. 482-487.
- Khan, M. (2005), “The Capitalist Transformation”, in K. S. Jomo and E. S. Reinert (eds.), *The Origins of Development Economics: How Schools of Economic Thought Have Addressed Development*, London: Zed Press, pp. 69-80.
- Khan, M. and Blankenburg, S.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in Asia and Latin America”, in G. Dosi, M. Cimoli and J. E.

- Stiglitz (eds.),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Capabilities Accumu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36-377.
- Krueger, A. (1990), "Government failures in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3), pp. 9-25.
- Kuznetsov, Y and Sabel, C. (2011), "New Open Economy Industrial Policy: Making Choices without Picking Winners", *PREM Notes: Economic Policy* No. 161, pp. 1-9.
- Lee, B.-C. and Jeong, J. H. (2011), "Leashed Capitalism in East Asia: Rent-based Development and Its Dilemma", KAPE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Economic Crisis and Innovation of Economics, Daegu 14-15 April 2011.
- O'Riain, S. (2004), *The Politics of High 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iain, S. (2011), "From developmental network state to market managerialism", in F. Block and M. R. Keller (eds.), *State of Innovation: The US Government's Role in Technology Development*, Boulder: Paradigm Publishers, 196-216.
- Rodrik, D. (2007), *One Economics, Many Reci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rank, A. and Whitford, J. (2011), "The Anatomy of Network Failure", *Sociological Theory*, 29(3), pp. 151-177.